

“노란봉투법, 원·하청 격차 해소 ‘진짜성장법’ 만들자는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년연장-청년일자리 충돌 의견
대기업·공공 맞고, 중소기업 틀려
연내입법, 노사이전 최대한 조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 봉투법) 취지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해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하는 ‘진짜성장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노조법 2·3조 개정취지에 맞게 현장 안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영계·노동계 모두에서 제기되는 창구단일화와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정책의 대원칙을 ‘노사자치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ILO 백년의 지성 결과로 도출한 노사자치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동부

라며 “경영계는 자율교섭을 통해 사법화 경향을 줄이고, 노동계도 창구단일화가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지만 악용·선례 문제를 해결해 자율적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와 충돌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20%는 맞고 80%는 틀린 얘기라고 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선 분명히 충돌한다”면서도 “중소기업에

서는 청년이 없어 정년을 없애달라, 나아가 외국인노동자를 풀어달라’고 할 정도로 미스매칭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나누면서 고용을 확대할 것인지, 정년 개념이 없는 수많은 플랫폼 비정규직노동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각각 맞게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현재 국회 정년연장 TF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연내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더 나아가 선택적 재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을 연내 입법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대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청년 고용 둔화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18개월 연속 고용률 하락은 기업의 경력직 선호, AI·로봇 대체, 지역 공동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산단 청년친화 환경 조성, 지역 미스매치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상식이 통하는 일자리, 괴롭힘·임금체불·산재 없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를 계기로 한 산업안전 강화 방향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울산 사고는 가슴 아프고 대통

령에게도 면목 없다”며 “정의로운 전환 개념에 산업안전평가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민들이 산재 감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엔 “올해 예산에서 5000억원 정도의 산재 관련 예산을 증액했고 산업안전보건본부와 협업체 분명이 감축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새벽배송 건강권 논란에 대해서는 “심야노동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필수 서비스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 금지할 수 없다면 건강 보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의 중점 과제에 대해 “산재 줄이는 일이 너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50인 미만·영세 사업장 등 그동안 통계에 잡히지 않던 사고를 타깃팅해 더 깊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꼭 발의하고 싶다”며 “광장민주주의가 왜 일터 앞에서 멈추는가. 일터에서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10월 누적 자동차 수출 596억弗 ‘역대최대’

산업부, 10월 수출액 55억 달러
대미수출 29% 급감, EU·亞 강세
누적 친환경차 수출액 8.1% 증가

올해 1월~10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596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럽·아시아 시장의 견조한 수요와 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린 반면, 미국의 25% 관세 부과 여파로 대미 수출은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20일 산업통상부의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10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10.5% 줄어든 55억 4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미 수출은 21억 2400만 달러로 29.0% 급감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월 이후 전월 대비 감소 폭이 커지며 미국 시장 부진이 완성차 수출 전체

를 압박하는 양상이다.

10월까지 누적 수출 실적은 북미(293억 6700만 달러·-13.4%)와 미국(247억 9300만 달러·-15.9%)이 부진했으나, EU(21.7% ↑), 기타 유럽(32.2% ↑), 아시아(39.1% ↑)에서 강한 증가세가 이어져 전체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10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19억 9700만 달러로 2.3% 증가했다. 물량 기준으로는 6만 4427대(0.9% ↑)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4만 2683대(3.9% ↑)로 가장 많고, 전기차 1만 9247대(0.3%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492대 순이다.

10월까지 누적 친환경차 수출액은 212억 2800만 달러로 8.1%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78억 100만 달러로 5.8%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농식품부 ‘성과보고회’ 개최
데이터 기반 농업혁신에 속도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성과가 공유되면서 데이터 기반 농업혁신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를 실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사례가 공유됐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한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장에서 개발된 민·관·학 활용사례

8개가 공개되면서 스마트농업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등 구체적 성과가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협중앙회는 스마트팜코리아의 품목별 환경·생육정보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농가의 재배환경을 시뮬레이션해 작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모델인 ‘스마트팜 길라잡이’ 서비스를 개발했다.

경희대 연구팀은 스마트팜코리아의 딸기 온실 환경 및 제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수 농가의 시간대별 온도 조절 패턴을 재현하는 ‘우수 농가 모방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2024년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어촌공 농업시설 안전진단 포럼

한국농어촌공사가 충남 예산에서 ‘20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진단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19일 이틀간 열린 이 포럼은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해 저수지와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진단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정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시설물 관리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미래 기후 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연세 기자

중동 3개국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기후부, 현지 물관리분야 협력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하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3개국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중동 지역에서의 정부 간 협력·교류를 비롯해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해외 수주 지원에 목적을 둔다. 오는 22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환경수자원 농업부(MEWA), 국영수도공사(NWC), 수자원협력공사(SWPC) 등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현지 핵심국가전략인 ‘비전 2030’ 이행을 뒷받침할 물관리·하수처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와 연계된 주요 녹색 기반시설 신규사업 입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외교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11월 23일에는 현지 핵심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물산업 협력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의 물 산업 정책과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1:1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중앙회가 19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청림농협 구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농협

농협중앙회, 윤리의식·투명성 확보 의지

‘청림농협 구현 결의대회’ 개최

농협중앙회가 ‘청림농협 구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윤리의식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20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범농협 차원의 고강도 혁신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전국 대의원조합장 294명을 비롯해 농협중앙회장, 임원, 집행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 결의대회는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농협은 밝혔다.

행사에서는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구현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실현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도약 등 3가지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세종=김연세 기자